

“범위 확대로 GDP 견인” vs “편법승계 악용 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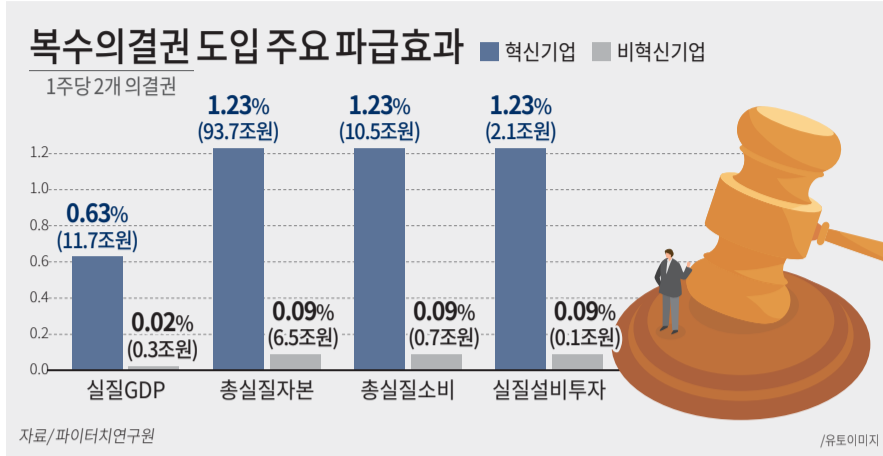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문턱을 최종 넘어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다른 숙제를 안겨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를 혁신기업에까지 확대해 적용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실질GDP)은 11조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0조5000억원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결권을 놓고 일부에선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또다른 쪽에선 이참에 아예 비상장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에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법이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면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엔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업 복수의결권 적용시 3년간 GDP 11.7조 상승 효과

‘1주 1의결권’ 원칙 벗어나 주주 손실방지 장치 부족

파이터치연구원이 2일 내놓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은 0.63% (11조 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23% (10조 5000억원)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조1000억원 가량의 실질

설비투자도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을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에 적용하면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이런 혁신기업이 늘어날 수록 총노동수요,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른다. 자본 공급량도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면서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지는데,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실질GDP (0.02%·3000억원), 총실질자본 (0.09%·6조5000억원), 총실질소비 (0.09%·7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09%·1000억원)가 혁신기업에 도입한 효과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복수의결권 도입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확률도 혁신기업은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0.69%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창업주이면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등기이사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

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최대 10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고, 상장시엔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편법 승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다른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위로 발행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근로자-사용자 입장차 확인... 파행책임 ‘시끌’ 여행 수요 증가에도 경기 지표 ‘사상 최악’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근로자측 박준식 위원장 사퇴 요구 사용자측 “동결도 어려운 상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 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계약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 날은 자격이 없는 임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

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호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차이나 뉴스&리포트

노동절 연휴기간 철도승객 사상 최대 4월 제조업 PMI 49.2... 수축 국면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철도승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한 보복여행 수요에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오히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인 것으로 나오면서다.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4월 29일~5월 3일) 첫 사흘 동안 약 1억6000만명이 항공과 철도 등을 이용해 여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국국가철도그룹은 지난달 29일 철도 승객은 19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된 열차 수도 1만2064대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음날인 30일에도 1783만명이 1만1353대의 열차를 이용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의 수도공항과 다싱공항은 29일 2120편의 항공편을 운항했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수용한 승객은 총 34만6900명이다.

상하이 푸둥 공항으로는 연휴 전날인 지난 28일 약 4만6000명의 승객이 도착했다. 3년 만에 최대치로 연휴 기간 동안 총 146만명이 상하이의 공항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행이나 소비 등 일부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 /AP·뉴시스

커졌다.

전국적으로 주요 소매 및 식음료 기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의류 매출은 20%, 보석류는 17.4% 늘었고, 주요 요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36.9%나 증가했다. 여행 예약 플랫폼 등에 따르면 관광 명소의 티켓 주문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00% 이상 급증했다. 호텔 예약도 2019년 노동절 당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회복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하락해 4달만에 다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시장 예측치 51.4에 크게 못미치면서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리고 리오프닝에 나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제조업 PMI는 작년 12월 47까지 하락했지만 리오프닝 이후 올해 1월 50.1, 2월 52.6, 3월 51.9 등으로 꾸준히 확장 국면을 유지해왔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국가의 재개방이 지난 몇 년간의 압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지만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안삼미 기자 smahn1@